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2012. 6. 20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 개 요 》

- ◆ 일 시 : 2012. 06. 20(수) 10:00
-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 발표 및 토론
 - ◎ 농업농촌 분야(김정섭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지역개발 분야(강현수 교수 : 중부대학교 교수)
 - ◎ 사회복지 분야(박종서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환경생태 분야(이인희 박사 : 충남발전연구원)
 - ◎ 산업지역경제분야(김선배 박사 : 산업연구원)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안)

1. 워크숍 개요

- 목적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시대 새로운 충남의 비전 설정을 위해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TF팀 활동)
- 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자유토론
- 일시 : 2012년 6월 12일 · 13일 · 20일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2. 분야별 발표 및 토론

일자 시간계획	부 문	발표자	지정 토론자		
			지역전문가	원내전문가	
6/12일 (14-16시)	총괄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정순오 교수 (한남대학교)	김용교 (전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	성태규 임준홍
		도청이전의 역사전/문화적 의미	임선빈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충남도 메가프로젝트 구상	오범균 담당 (충남도 일반정책)		
6/13일 (15-16시)	행재정	지방행정	금창호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호택 (배재대 교수)	고승희
6/13일 (16-17시)	문화관광	문화(정신문화 포함)	김영준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선기 교수	김경태
6/20일 (10-11시)	농업농촌	농업농촌개발	김정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승욱교수	조영재
6/20일 (14-15시)	지역개발	지역구조 재편과 개발전략	강현수 교수 (중부대학교)	이덕복 박사 (LH연구원)	오용준
6/20일 (15-16시)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박종서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희 박사 (충남여성정책개발 원)	송두범
6/20일 (16-17시)	환경생태	환경정책기본방향	이인희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이소라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김금수 (호서대 교수)	이인희
6/12일 (17-18시)	산업· 지역경제	지역산업발전 방향	김선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안기돈 교수 (충남대학교)	백운성

* 충남도 전문가는 별도 자료 참조

* 일정 및 발표자, 토론자는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내포시대 충남 비전 수립을 위한 충남도 토론회

일자 시간계획	분 야	충남도 전문가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연락처	e-mail
6/12일 (14-16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오범균	정 책 기 획 관 실	일 반 정 책 담 당		
	도청이전의 역사전/문 화적 의미					
	충남도 메가프로젝트 구상					
6/13일 (15-16시)	지방행정	강관식	총 무 과	행 정 6 급		
6/13일 (16-17시)	문화(정신문화 포함)	이진수	문 화 예 술 과	문 화 담 당		
6/20일 (10-11시)	농업농촌개발	이홍우	농 업 정 책 과	농 정 기 획 담 당		
6/20일 (14-15시)	지역구조 재편과 개발전략	최재왕	건 설 정 책 과	도 시 계 획 담 당		
6/20일 (15-16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김승제	저출산고 령 화 대 책 과	행 정 6 급		
6/20일 (16-17시)	환경정책기본방향	박용권	환 경 정 책 과	환 경 정 책 담 당		
6/20일 (17-18시)	지역산업발전 방향	이용문	전 산 업 과	행 정 6 급		

제1주제

충남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및 핵심 프로젝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충남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및 핵심프로젝트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서론

- 농산물 시장 개방,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더불어 내포 신도시 조성, 도청 이전 등이 완료되면 충청남도 내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됨.
- 이러한 변화는 충청남도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역 불균형 심화, 농어촌 인구 감소 등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음.
-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부정적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농어촌이 나아갈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개발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및 여건 변화

1) 시대적 전망과 여건변화

- DDA,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
 -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5대경제권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 EU 등임. 이들 국가들과의 FTA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 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농촌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인식 변화**

-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저질의 농산물들이 수입된다면 이러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국민 의식조사 결과¹⁾에서도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뽑음
- 농어촌 공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음. 농어촌·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류 인구의 증가는 물론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집계한 2011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10,503호로서 전년(4,067호) 대비 158% 증가.

표 5.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단위: 명

구분	도시→농어촌 (A)	농어촌→도시 (B)	A/B
2001년	717,208 (7.7%)	735,063 (7.9%)	0.98
2005년	685,031 (5.7%)	700,750 (5.9%)	0.98
2009년	634,807 (5.5%)	603,715 (5.2%)	1.0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주1: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 **다원적 기능, 어메니티, 경관 등 농업·농촌에 대한 재조명 확산**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자연환경 보전 기능,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기능, 휴양제공 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 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유산, 향토음식 등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농어촌 경관이

1)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평가됨.

2)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될 전망

- 농어업과 2·3차 산업과의 연계, 친환경 농업 확대, 농어업 수출 산업화, 생산·유통 조직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농어촌 영향 평가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장소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이자 주거 공간으로서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이에 따라 농어촌 정주 공간 재편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

3) 충남의 여건변화

○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필요성 증대

- 내포신도시와 각 시·군간 교통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임. 이와 더불어 도청이전이 완료되면 환황해권시대 거점지역으로서 서해안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 구조에서 벗어나 충남 내륙,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내포신도시는 주변의 도시 및 주요 집적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자원투입으로 전략적 도정과제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향토산업의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 취약

- 충남지역의 대표적 향토산업으로는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공주·부여의 밤 등을 꼽을 수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충남에서는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이 취약한 실정이고, 특히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취약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2008년 기준)은 일반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9%, 읍부 86.5%인데 반해 면부는 54.9%에 그치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7%, 읍부 82.8%인데 반해 면부는 36.0%로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함.
- 2008년 기준 충남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61.8%로서 전국(평균 88.6%)에서 가장 낮으며, 시 지역 69.4%에 비해 군 지역은 46.8%로 농촌지역은 더욱 열악함.
- 충남 농어촌 지역 교통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16개 시·군 23개 업체에서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 과소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효율이 낮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등 충남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여건이 열악하며 지역 간 불균형 정도도 높은 편임.

○ 농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마을 과소화·공동화의 심화

- 충남지역의 농가수 및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충청남도의 4,517개 농어촌 마을 중 3.5%인 158개 마을이 가구수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임. 특히 부여군, 연기군, 서천군 등의 과소화 마을 비중이 높은 편임. 새로운 인구 유입, 인구 과소화·공동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성격도 변화할 전망.

표 6. 농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업가구	농가인구	농업가구(전국대비 비중 : %)	농가인구(전국대비 비중 : %)
2005	1,272,908	3,433,573	163,197(12.82)	446,022(12.99)
2006	1,245,083	3,304,173	161,986(13.01)	437,295(13.23)
2007	1,231,009	3,274,091	161,025(13.08)	433,585(13.24)
2008	1,212,050	3,186,753	160,734(13.26)	428,273(13.44)
2009	1,194,715	3,117,322	158,528(13.27)	417,312(13.39)

자료 : 충청남도, 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표 7. 충청남도 과소화 마을 현황

시군	과소화 마을	총 마을 수	과소화 마을 비중
계룡시	3	63	4.76%
공주시	2	275	0.73%
금산군	12	249	4.82%
논산시	9	420	2.14%
당진군	1	260	0.38%
보령시	4	235	1.70%
부여군	36	434	8.29%
서산시	4	261	1.53%
서천군	21	315	6.67%
아산시	12	372	3.23%
연기군	15	203	7.39%
예산군	9	304	2.96%
천안시	18	426	4.23%
청양군	2	183	1.09%
태안군	0	185	0.00%
홍성군	10	332	3.01%
합계	158	4,517	3.50%

주: 과소화 마을은 가구수 20호 미만의 마을을 의미함

3. 충남의 정책방향

1) 기본 방향

-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촌 지역 사회 조성
-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 도시민과 소통하는 자주적 농어촌 지역 사회 조성

2) 주요 전략

- 친환경·지역 순환 식품 체계 정립
 - 지역의 친환경적 농업 생산 시스템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통 체계 간의 조화 추진
 - 지역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로컬 푸드 체계 확립
- 민관협력의 사업 추진 체계 구축
 -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 참여 보장 시스템 확립
 - 행정 주도의 일방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주민 참여와 협의를 통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체제 확립
-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 기반 확립
 -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리더육성
 -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어업의 6차 산업화 확대
 - 농어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지원 시스템 개편
 - 기반정비,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시스템 지양
 - 지역 리더 양성, 주민역량 강화, 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시스템 확립

4. 핵심프로젝트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FTA 등 수입개방,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대 등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충남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어촌 활성화의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조직 및 리더 육성,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 등
 - 친환경 농업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
 - 도시 학교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과 연결함.
- 고품질, 안전성, 친환경 축산 생산 시스템 확보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축사시설 현대화
 -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분뇨자원화
 - 유통판매시스템 선진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상생기반 구축
- 가치있는 친환경 임산업 육성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산채재배농가 선정 및 지원, 산채재배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 유통 지원 등
 - 가치있는 산림 자원 육성: 산림유역 관리, 친환경 벌채, 목재바이

오매스 공급 등

- 갯벌 친환경 생산인프라 구축, 지역 대표 유망품종 집중육성
- 바지락 명품 단지, 갯벌 참굴 양식, 김 클러스터 구축, 해삼 특화단지 등

(3) 기대효과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 및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
- 명품브랜드 육성 및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충남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축산업, 수산업의 체계적인 개발로 충남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으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

2) 충남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 공급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진 및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충족
- 친환경고품질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생산·유통 정책의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2) 주요내용

- 지역순환 식품체계 기본 계획 수립
- 지역식품 체계 실태조사, 기본 계획 수립
- 식품체계 구축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 심포지엄, 농민장터,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학교에 공급
 -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등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광역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기대효과

- 친환경고품질정책과 로컬푸드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
-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및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체계 마련

3) 충남 희망기업 육성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농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및 판매 조직 필요
- 지역의 우수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레스토랑, 휴양, 교육이 연계된 마을 자립형 모델 구축
 - 농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 유통하는 마을을 영리법인(마을기업)으로 전환 유도
- 특성화된 농식품 가공 중심의 마을 기업 창업 지원
 - 컨설팅,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 제조·가공 시설 신축 혹은 개보수
- 공동작업장, 판매장, 식당 등

(3)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 자원과 특산물의 상품화를 통해 마을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
-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의 융합을 통한 마을의 소득 창출

4)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민 유치를 통해 마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중심의 맞춤형 마을 조성이 필요

(2) 주요내용

- 도내 역량수준 유형별 전략적 마을 만들기
 - 농어촌마을 자원 조사, 역량 수준별 진단 분류
 - 마을 만들기 조직 및 리더 육성
 - 유형별 발전 사업의 계획과 실행
 -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마을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사업 추진
- 소득창출형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 만들기
 - 보조금 지원 의존에서 탈피하여 최소한의 행·재정 지원만 하는

자립 마을 조성

- 기존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일자리·소득 창출 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대효과

-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육성함으로써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농촌 인구 감소 완화에 기여
- 농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으로 생활 만족도 증대

5) 혁신 리더 육성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 리더는 지역 역량 강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연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지역 리더 양성
 - 지역리더프로그램 개발
 - 지역리더 양성 교육
 - 교육이수자 인력 Pool 구축
- 지역 리더 교육 기관 운영
 - 사업 담당자, 관련자 중심 교육

- 사업별 팀 구성과 팀별 토론 활성화
- 참여식 실천학습 모델(participatory learning & action: PLA)을 활용한 효과적 학습 체계 구축

(3) 기대효과

- 리더들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
-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 양성

6) 충남 도농상생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시민들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에 체험·휴양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상생 발전의 기반 마련
-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마을 과소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

(2) 주요내용

-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
 -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 체험프로그램 상품 개발
 - 여행상품화 시범운영
- 귀농·귀촌 유치 정착
 - 귀농·귀촌 수요 통계 정비
 - 귀농귀촌인 모집 및 투어
 - 귀농귀촌 애로 지원단 운영

- 농어촌 응원 운동 전개
 - 농어촌응원운동본부 발족
 - 도농교류 및 소비 캠페인
 - 1사1촌 운동 전개

(3) 기대효과

-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귀농·귀촌인 증대로 인구 감소 완화 및 마을 활력 증진
-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도농상생운동으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제2주제

지역구조 재편과 개발 전략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

내포시대 충남 비전

지역구조 재편과 개발 전략

강 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1. 서론

- 1932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후, 80 여년이 지난 2012년 말 충청도청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임.
- 충청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이번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충남 도민의 통합과 더불어 그동안 낙후되었던 충남 서부권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부축 중심의 충남 지역 구조를 새롭게 개편 하는 등 충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 글에서는 충청도청 이전을 충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충남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고 함.

2. 정책 및 여건 변화

1) 시대적 전망과 여건변화

□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저성장 시대의 도래

: 고성장 시대 부동산 개발 위주 개발 정책의 한계 봉착

-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3명으

로 세계 최저 수준임

- 저출산 ·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어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시대가 도래됨
- 경제의 저성장과 동시에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했던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있음
- 입지 환경과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도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서울 용산 개발, 인천 송도 개발 등)
- 기존의 부동산 개발을 통한 지역 개발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
-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개발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전제로 한 외부 자본 유치 방식이었으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방식의 자본 유치를 기대하기 힘들어짐
-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세제가 주 수입원인 지방재정에도 타격을 줌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충남 내 각종 개발사업, 특히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내포 신도시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등이 난관에 빠질 수 있음.
- 충남에서도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동산 개발 방식의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 현실 사정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실 있고 실효성 높은 개발을 추구해야 함.

□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가능성

: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지역 정책 필요

- 지구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효과에 의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구 전체의 기후안정성이 약해지면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

- 화석연료 고갈 위기 속에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
 - 현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보가 울리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와 탄소발생량을 저감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세계적 과제로 대두
 - 환경 및 자원 위기가 국제적인 정치·안보 문제로 비화
 - 온실가스와 탄소발생량을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음
- 최근 중앙 집중식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 지역 분산적 에너지 수급 체계로 전환하고, 화석 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전환하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이 산업 및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현재 충남은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 입주해 있는 관계로 국내 16개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음
-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구 환경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은 물론 충남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경제의 부상 및 환황해권 경제권의 도래

： 중국 및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충남의 새로운 가능성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
-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산업 연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대외 무역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됨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급증하고 상호 경제의존도도 증대하면서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중국 경제의 성장 및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증대함에 따라, 중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충남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충남과 수도권 연계성 강화

: 수도권과 충남이 연계된 거대도시권 형성 가능성

-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 수도권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넘어서 충청권 북부 지역, 강원권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세종시 건설,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KTX 및 고속도로 망 확충 등으로 충남 지역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기업 활동 및 일상 생활 연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수도권에 잔류하는 중추행정기능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추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교류 연계도 강화될 것임.

- 수도권과 충남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세종시를 포괄하는 거대도시권 - 대수도권 - 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충남 전체가 수도권에 편입되면서, 충남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으나, 동시에 자칫 중추관리기능이나 고부가가치 기능은 수도권에 의존한 채 저부가가치 분공장 경제 구조로 전락할 위험도 상존

- 세종시 건설 및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기간 교통망 건설을 충남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2)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 정권 교체기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 2012년 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중앙정부 지역 정책의 방향도 새롭게 전개될 것이 예측됨

○ 현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제도의 수정이 예측됨

-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의 핵심인 5+2 광역 경제권 정책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 광역경제권 보다 작은 단위인 도시권 (City Region)을 강조하는 정책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일각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을 더 확장하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포괄하는 중부경제권과, 영남과 호남을 포괄하는 남부경제권이라는 두 개의 경제권으로 묶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수도권 규제 논의도 대선 과정에서 쟁점 예상

- 그동안 충남의 산업 발전 및 기업유치에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

-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왔음.

- 올해 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거 이후 탄생할 새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광역경제권 정책이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는 충남의 지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복지 수요의 압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지원 예산 축소 예상

-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저성장 시대 도래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대하고, 복지 분야에 중앙정부의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면서, 지역 개발 분야에 돌아갈 중앙정부 재정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경제의 위기와 저성장 시대가 맞물려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중 지역 개발 분야의 재정 긴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지역 개발 분야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분권이 시대적 대세이므로, 지역 개발 분야에서도 지방분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임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 개발 계획을 여러 군데 무분별하게 펼쳐 놓기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집중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 지역 지원 제도의 정비 예상

- 현재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해안권 및 내륙권 등 다양한 지역개발 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중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절차의 장기간 소요로 민간투자가 부진하며, 기관·부서간 조정기능 미비 등으로 실제 지역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 이러한 문제 인식에 의거하여 지역개발 관련 제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1년 3월에 입법 예고된 바 있음
- 대선 이후 지역개발 관련 중앙정부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가시화될 것임.

- 대체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서간 통합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도 및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임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역개발 정책 대신, 충남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정책 개발이 필요

3) 충남의 여건변화

□ 내포 신도시로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충남 지역 구조의 개편 예상

-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되고 내포 신도시 건설 계획이 원래 목표대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현재 경부축 중심의 충남 발전 축이 서해안 쪽으로 이동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세종시, 천안·아산 등과 삼각 발전축을 이뤄 충남의 새로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충남 서북부 지역 발전지역의 파급효과를 남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충남도청으로부터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충남 남동부 지역인 금산군, 논산시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세종시 건설의 파급 효과 가시화

- 세종시 건설 및 중앙행정기능의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세종시 건설의 파급효과가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임
- 2012년 말부터 중앙정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중앙정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산업 및 종사자의 동반 이전이 뒤따를 것임
- 세종시 건설로 인해 인근의 충남 지역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세종시로 이전한 기능과 수도권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능들 사이의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충청권과 수도권 사이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KTX를 포함한 충남의 새로운 간선 교통망 구축

- KTX 호남선, 서해안 철도, 제2 경부고속도로 등 충남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충남 지역 구조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경부 축 일변도의 충남의 기간 교통축이 다변화되면서, 충남의 지역 발전 축도 다변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충남의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과 정책 목표

□ 중국 교류 중심지 역할 강화

- 중국과 한국의 경제 교류가 증진되면서 한중 분업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
 - 중국은 광활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완제품 조립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부품 소재 및 장비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최근 10 여 년간 충남의 대외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대신 중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충남의 최대 수출국이 바로 중국이며, 두 번째는 홍콩임. 미국은 EU에 이어 충남의 4위 수출국
 - 충남은 중국과 가장 근접한 물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 석유 제품 등 주력 대중 수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충남은 중국과 가까운 물리적 위치를 잘 활용하여, 대중 수출 기지 및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충남은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인 중국 황해 연안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환황해권 요충지임

□ 저성장 시대, 환경 및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녹색 성장 동력 확보

- 충남의 현재 주력 산업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산업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 차원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현재 충남 산업구조가 취약성이 드러낼 수 있음.
- 저성장 시대의 도래,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남 내부에서 새로운 녹색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함
 -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산업 중에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함
 -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충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
- 충남의 도시 및 지역 공간 구조도 가능한 탄소 발생 및 에너지 절감 구조로 개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서북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균형 발전 추구

- 현재 충남 서북부권과 나머지 지역간 경제와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 이전 기업 덕분에 급격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충남 내륙 지방이나 남부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
 - 이로 인해 도내 수도권 인접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격차 문제 대두.

- 충남 내륙 지방이나 남부 해안 지역의 경우 기존 농업을 대체할 성장 동력 부재로 인구 유출 및 노령화 가속
- 서북부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및 발전 프로젝트 필요.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확보

-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던 산업 기능이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성장의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성장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충남 북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대학도 마찬가지) 으로 아직 충남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 연구개발 기능이나 고급 서비스 기능은 충남에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에 잔류.
- 이로 인해 충남은 산업 생산에 특화된 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는 연구개발 및 고급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의존.
-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산업 성장에 걸맞는 생활기반 시설이 취약해서 기업체 종사자들의 정착 의지도 낮음
- 산업 기능에만 특화, 주거 교육 문화 기능이 취약하며, 최근 급격한 난개발로 정주환경 및 생활의 질이 높지 못함.
- 충남에서 일하는 고급인력의 상당수는 충남에 정착하지 못한 채, 수도권에서 출퇴근.
- 이로 인해 충남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에 비해 1인당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즉 충남에서 생산한 부의 외부 유출이 발생함.
-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확보가 필요

- 산업 기능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 서비스 기능, 주거 교육 문화 기능들이 함께 고루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산업체 종사자가 충남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여, 발전 효과가 지역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부로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주요 전략

□ 내포 신도시 조성의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 내포 신도시 조성이 충남 발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Link City)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포 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고, 역류 현상 등 부정적 효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내포 신도시 조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기능 특화를 통한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내포 신도시가 충남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내포 신도시가 성장의 잠재력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서해안 축을 포함한 지역발전 축 및 거점의 다원화

- 천안-세종시-대전을 잇는 경부축과,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잇는 서북부권역에만 산업과 인구가 집중하면서,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 축 및 거점의 다원화 전략이 필요.
- 서해안 축, 제 2 경부축, 금강 축 등 충남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한 지역 발전 축이 필요.

- 이중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서해안 축에 대한 충남 차원의 관심이 필요

□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 충남의 핵심 개발 예정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아산 KTX 역세권,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 태안 기업도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등이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연 혹은 포기 상태에 있음
-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청사진은 이미 벌써 마련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제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보다, 각 기업체의 개별적 입지 결정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이 상존
- 개별 입지에 의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 지역개발 사업 추구

- 가능성이 희박한 무모한 개발 계획을 양산하기보다, 개발 필요성과 개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미집행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등의 경우 계획의 대폭적인 축소와 수정 과정을 통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함
- 개발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기존 개발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연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완벽한 보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핵심 프로젝트 제안

1) 내포 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주변지역 산업단지 개발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말부터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포 신도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임.
- 현재 내포 신도시 개발 목표는 2015년까지 인구 5 만명, 2020년까지 인구 10 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저성장 상태의 지속 등으로 내포 신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 유치, 토지 및 주택 분양, 인구 유입 모두 쉽지 않은 상태임
- 내포 신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구 유입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선 입주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계속될 뿐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의 경영 압박이 예상됨.

(2) 주요 내용

- 내포 신도시 구역 내부의 자체 동력만으로 계획인구의 달성이 불가능 하므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필요.
- 내포 신도시의 2020년 계획인구 10 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청 및 유관 기관 이전만 가지고는 달성 불가능
- 최소한 목표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청 이전과 무관한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해 확보해야 함.
- 현재 내포 신도시 내부에 고용 창출을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신도시 내부 지역은 단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며, 목표대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창출될 수 있는 고용 인원의 한계가 있음 (현재 약 5천명 정도로 예측)
- 내포 신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기능 도입이 필요

- 현재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은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 유입 가능 인구가 별로 없음.
- 인근 흥성 및 예산 주민들의 신도시 입주를 유도하는 것은 기존 도시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포 신도시 자족성 가능 인구를 확보해야 함. 어느 정도 자족 가능한 인구 (내포 신도시 최종 목표 인구인 10만명 수준) 가 유입되어야, 추가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육 문화 시설의 입주가 가능
- 현재 충남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 대안은 산업 단지 개발임.
- 내포 신도시의 출퇴근 가능 지역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계획적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
- 내포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공해 업종 유치를 지양하고, 비공해 친환경 업종 위주로 유치
- 내포 신도시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건설
- 현재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 정책 및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 정책과 연계 가능
- 현재 내포 신도시가 최첨단의 정주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 개발 될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

(3) 기대효과

- 내포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조기 활성화
- 내포 신도시가 충남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환황해권의 거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서 우선 인구 10 만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흡입력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고용기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도시 인프라, 교육, 문화 시설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음.

2) 내포 신도시 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내포 신도시가 원래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낙후된 충남 서부권의 활력을 높이는 지역생활권 중심 도시이자 신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내포 신도시 조성 사업이 현재 내포 신도시 자체의 성공적 건설에만 국한되어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광역적 비전이 부족한 실정임
- 수도권 산업과 인구 유입을 위한 광역 정주권으로서 내포 신도시 광역권 육성이 필요
-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는 내포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기존 지역의 쇠퇴 혹은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
-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도시 환경의 질이 주변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져 인근 소도시의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을 우려
- 최근 홍성과 예산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등, 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공동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 모색이 필요.

(2) 주요내용

- 내포 신도시 구역 뿐만 아니라, 인근 홍성군과 예산군, 나아가 서산과 당진을

포함한 내포 신도시 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지역과 기능 분담 및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내포 신도시 광역권 전체가 하나의 대도시처럼 기능하게 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흡입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내포 신도시와 흥성, 예산, 서산, 당진 등의 광역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생성 및 보유 자원 공동 활용, 중복 투자 방지
- 내포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 강화, 내포 신도시 광역권과 충남 및 국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 SOC 구축 계획을 마련
- 광역적 생태 환경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자연 경관을 보전

(3) 기대효과

- 내포 신도시 구역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내포 신도시 광역권 전체가 충남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광역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됨
- 내포 신도시 조성 작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주변 지역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
 - 내포 신도시 조성 지역과 주변 인근 지역간의 화합과 동반 성장을 유도

3) 서해안 발전 종합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서해안은 중국 및 수도권과 가까워서 산업입지로서 매우 우월한 조건임과 동시에, 뛰어난 자연생태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태안해안국립공원이나 서천 습지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없어 한편에서는 난개발이 초래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잠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인해 가로림만을 둘러싼 갈등 사안이 발생
- 서해안 지역 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보존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2) 주요내용

- 충남 서해안 지역을 산업용 개발 지역과 자연생태 보전지역, 해양관광 지역 등으로 구별하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 비전과 전략사업 위주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0)>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실행가능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 정교화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충남의 핵심 도시권을 서해안 축을 따라 연계하는 전략 수립
-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가 될 거점 항구 및 주변 지역 개발
-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 지역의 미개발 자원 활용 방안 강구

(3) 기대효과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환황해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강화에 기여
-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는 장기적 관점의 서해안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4) 충남의 관문 항만 개발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서해안은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인 중국 황해 연안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환황해권 요충지임
- 최근 충남 및 충남 주변 지역의 수출입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대중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충남권 항만의 물동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충남의 수출입 규모에 비해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에 비해 충남 지역 항만 개발 수준이 매우 낮음.

(2) 주요내용

-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을 대중국 수출입 및 민간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 당진항 : 황해자유구역 및 세종시의 관문으로 인근 평택항 수준으로 개발
 - 대산항 :중국과 최단 거리 항만이라는 입지 이점을 활용한 국제여객항 조성
 - 장항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인근 새만금 지역 및 군산항과 연계 개발
-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을 지원하는 도로망 및 철도망, 기반 시설 및 배후 지원시설의 체계적 건설 추진

(3) 기대효과

- 대 중국 수출입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해 충남 지역의 전반적인 입지 경쟁력 강화
- 항만 물류 산업 및 운송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 확보

5) 시군 연계 생태·문화·산업 관광 벨트 조성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관광 산업은 청정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
- 제조업 여건이 미흡한 충남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생태·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
-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이 입지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 산업 시설을 관광 자원화하는 산업 관광 코스 개발
- 한 지역의 관광 자원만으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이 필요

(2) 주요내용

- 충남 지역의 시군을 연계하는 다양한 테마와 유형의 관광 벨트 및 관광권역을 조성
 -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 / 금강 수변 생태 관광 벨트 등 해안과 수변 관광
 - 장항선 문화 관광 벨트 / 1번 국도 노선 관광벨트 등 철도와 도로 노선 관광
 - 백제 문화 관광권 / 기호 유교 문화 관광권 / 내포 문화 관광권 등 전통 문화 관광
 - 삼성전자 천안 아산 공장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당진화력 - 대산공단을 잇는 첨단 산업 관광 등
- 유사한 관광 자원을 가진 충남의 지역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 관광 교통 수단을 개발
 - 충남도 및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광 협력 사업팀을 조직하여 공동 스토리텔링 개발, 지역 관광 축제 일정 조율

(3) 기대효과

- 새로운 관광 테마를 발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를 통한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관광객, 그리고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의 유입 기대
-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시군 간의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상호 상생 협력과 시너지 효과 유도

6) 충남 소재 KTX 역세권 거점 개발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KTX 고속전철 망이 확충되면서, 교통의 요지인 KTX 역세권이 지역개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
-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KTX 역사인 KTX 천안아산역 및 KTX 공주역의 역세권의 잠재력 활용 필요

(2) 주요내용

- 천안아산역 및 공주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 천안아산역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느 곳과 쉽게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점으로, 주변에 탕정 산업단지, 천안산업단지 등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이미 집적되어 있음.
- 공주역은 논산시 및 세종시와 인접할 뿐 아니라, 충남 남부지역 및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임

< 천안아산 KTX 역세권 : 충남 연구개발 중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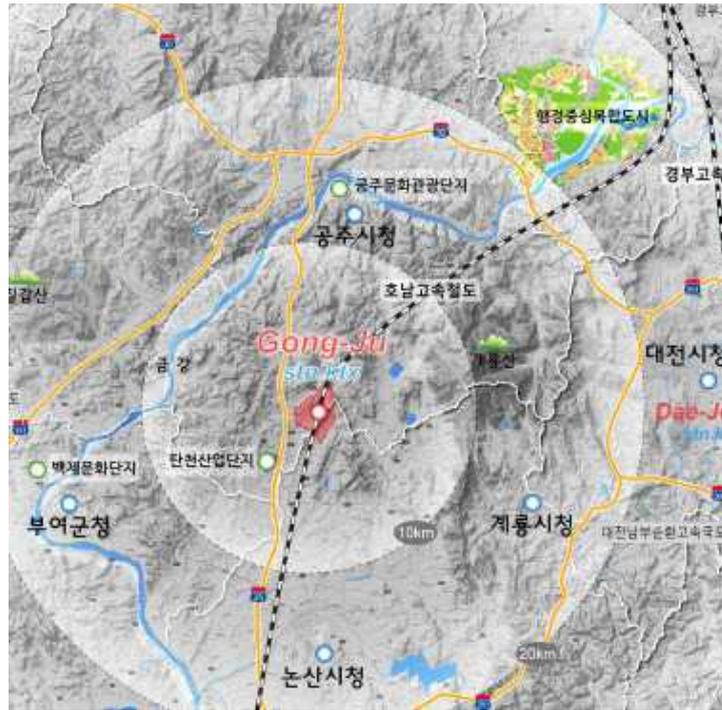
- 천안아산 역세권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의 허브로 개발
 - 현재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부족한 기능이 연구개발 기능임
 - 연구개발 기능의 선호 입지가 대도시 지향성, 쾌적한 주거환경, 대학과 연계 가능성, 산업 중심지와 근접 등을 요구한다고 할 때, 천안아산역세권은 충남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 입지가 될 수 있음
- 연구개발 기능 및 주거 기능, 교육,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 지역으로 육성
 - 주거 기능, 문화 기능은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공 및 민간의 연구개발 기능과 교육 기능을 유치하는데 충청남도의 역할을 집중.
- 이를 위한 선도 사업으로 차세대 복합 연구개발 센터 건립 사업 및 해외 유력 연구기관 투자 유치 추진
 -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충청남도 주력산업 및 IT · BT · NT · CT 등 차세대 융복합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연구개발 기능 확충

< 공주 KTX 역세권 : 충남 남부 지역의 문화 및 산업 중심지 >

- 공주역세권의 경우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문화 및 산업 중심지로 개발
 - 공주역세권 주변의 충남 남부 지역은 충남 내에서 상대적 저발전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으로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 하지만 공주역세권은 공주, 부여, 전북 익산을 잇는 백제 문화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백제 문화권 관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공주역세권은 대전시 및 세종시와 인접해 있고, 간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시설들을 유치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저공해 녹색산업, 인근 지역의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주변에 부족한 산업 기능을 확충

- 인근 지역과 연계된 문화 산업, 식품 산업 적극 유치



< 그림 > 공주 KTX 역세권 위치도

- 공주 역세권의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등 인접 지역과 연계 교통 체계 구축을 조속히 지원하여, 발전의 시너지 효과 공유
- 공주 역세권과 인접한 논산시의 육군 훈련소 및 국방과학 클러스터와 연계

(3) 기대효과

- 천안아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및 주거 문화 교육 기능 확충
- 공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주 지역의 지역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 지역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거점 마련

7)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현재 충남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극히 부진
 - 개발가능성이 없는 서산 지곡 지구는 이미 구역이 해제되었고, 당진 송악·아산 인주지구는 규모가 축소되었음
-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2) 주요내용

- 이미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지정 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토지 가격이 싼 신규 대체 부지 물색
- 외국인 투자용지 공급, 산업단지 중복지정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 기존의 계획입지 중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입지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적 장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원형지 개발, 대항 개발 등 대안적 개발방식 도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원가를 저감

(3) 기대효과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지역 발전의 국제적 거점 확보
- 장기 미집행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8) 산업단지 주변 정주환경 및 산학연계 개선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공장 유치 등으로 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적 정주환경의 질이 낮아 산업체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충남도는 민선 5기부터 생산·문화·업무기능이 복합된 이른바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지식경제부도 2010년부터 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3터(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벨리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형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등을 확충
- 비슷한 맥락에서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산학융합지구는 2011년 첫 사업으로 3개 지역 (구미, 시화반월, 군산새만금)을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

(2)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임.
- 산업단지 인근 도시가 산업단지의 배후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계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 확충
- 산업단지 내부 및 근처 지역에서 교육, 취업 및 R&D가 융합된 산학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

- 주변의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의 산학 연계 지원

(3) 기대효과

- 산업체 종사자가 충남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충남에서 생산된 소득의 외부 유출을 방지 하고, 지역 경제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산학 연계, 연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9)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현재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탄소 다배출 구조인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의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구조의 취약성 노출 우려
-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
- 충남 지역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함.

(2) 주요내용

- 충남 지역에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혹은 기존 산업단지 중 최소 2곳 이상을 생태산업단지로 조성
-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업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뜻함
- 산업단지 내부 및 인근 주변 지역과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여 에너

지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축을 도모

- 생태산업단지는 산업분야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적극 추진 중인 사업임

○ 충남 지역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공원화 사업 추진

- 충남 지역에서 환경 오염 정도가 가장 심한 산업단지부터, 환경 개선 사업 및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 추진

-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이란 에코디자인(eco-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단지와 주변의 자연생태 및 경관을 조화시켜, 산업단지가 일종의 공원 같은 경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3) 기대효과

-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의 형성되고 환경오염은 줄고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충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10)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낙후 지역 성장동력 확보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의 경우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쇠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금산, 논산, 공주, 부여 지역은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으로 인해 도청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소외감 발생

- 충남 내부의 지역 발전 격차 해소 및 도청 이전에 따른 소외감 극복을 위해

각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 재생 전략 및 사업 추진이 필요

(2) 주요내용

- 제조업 유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의 경제 재생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여 작지만 알찬 성장 동력을 확보
- 충남 각 지역의 상황에 알맞는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지원
 -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 바람이 많은 지역에는 소규모 풍력발전
 - 발전소 인근 해안 지역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수생바이오매스 생산
 - 신개발 주거 지역의 경우 에너지 자립형 주택단지
 -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농산어촌 마을은 에너지 전환 마을 조성 등

(3) 기대효과

- 지구환경 개선과 동시에,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 친환경적 가치를 살리면서 낙후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확보

제3주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박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서론

-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출산력과 인구변동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 ‘인구변천 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출산력의 변천은 근대 사회의 사회·경제적 힘에 의해서, 그리고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제도적 틀에 영향을 받음
 -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근대적 공업화와 도시화가 출산력 변천을 초래(김한곤, 1993)
 - 도시와 농촌 간의 출산력의 차이는 주로 생태환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때문(김두섭, 2007)

- 다른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큰 틀에서 이미 결정된 구조
 - 현재 시점의 인구구조는 이미 출생한 사람들의 구성비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50~100년의 추세는 이미 결정된 구조
 - 영국 옥스퍼드대학 콜먼교수(David Colman)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코리아 신드롬 발언
 - 콜먼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이 심각한 저 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백년도 안 되어 현재의 절반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2305년이 되면 한국 인구는 단 500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언급

-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더욱 빠르게 진행
 - 한국의 출산율 변화의 두 가지 특징으로,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간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장기 지속된다는 점과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 ※ 고령화 진전 속도: 노인인구 비율 7~14% 도달기간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발생시킴
 -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재정악화, 가족구조와 사회관계의 급격한 변화

-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을 고비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편, 정부의 부채규모가 GDP의 300%를 초과(IMF, 2008)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저출산·고령화 속에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서 핵심적 과제라는 데 모두 공감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
- 문제제기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두가지 접근법 구분: 경제정책적 접근, 사회정책적 접근
 - 앞서 언급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주로 경제정책적 접근으로, 발전, 성장, 효율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이고, 원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정적 효과의 대체 방법에 초점
 - 다른 한편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의 우려로서, 원인에 대한 사회적 치유에 초점
 - care risk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메가크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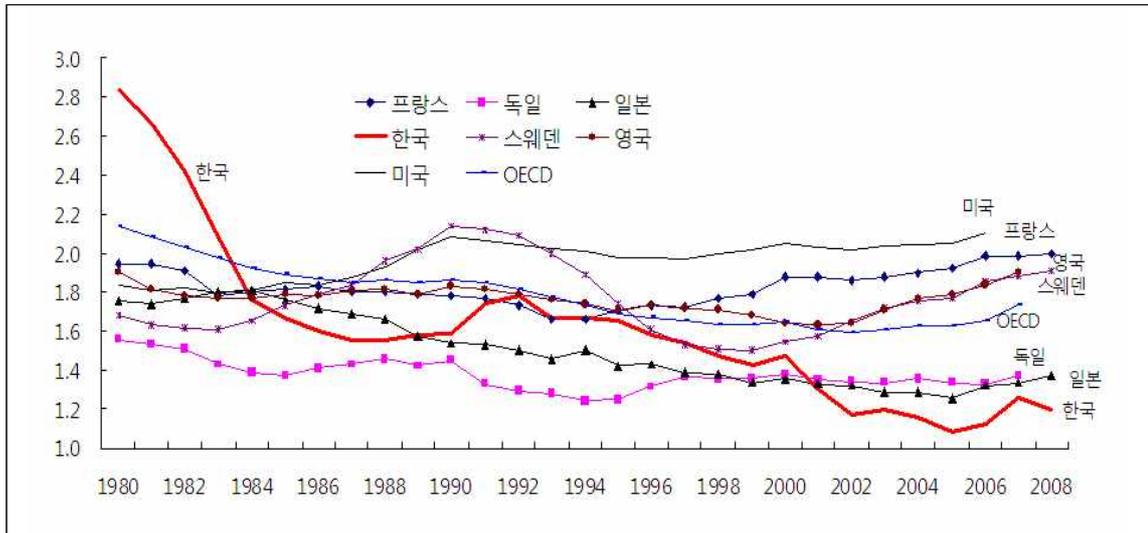
2. 정책 및 여건 변화

1) 시대적 전망과 여건변화

-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 추세
-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하나의 큰 경향성을 형성하였는데, 특히 출산력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출산율 하락의 일반적 추세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국가들은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이하 출산율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1.3 이하 초저출산 국가가 확산
 - 최근 몇 년간 주목할 점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주요국가(북유럽국가와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 이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효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이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2001년 이후 1.3명 이하 초저출산수준이 지속, 현재까지 26년 장기지속
-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수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1.2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으로 판단

하기는 이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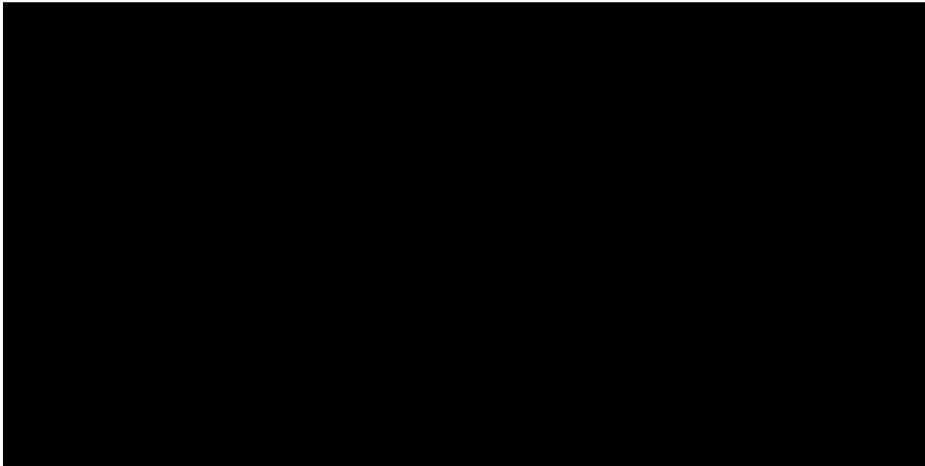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

- 저출산 추세와 관련된 인구변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구 규모의 감소라기보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음. 그러나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분명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질 것
 - 전체 인구의 30%, 40%, 또는 5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그 때의 사회체계는 현재와 총체적으로 다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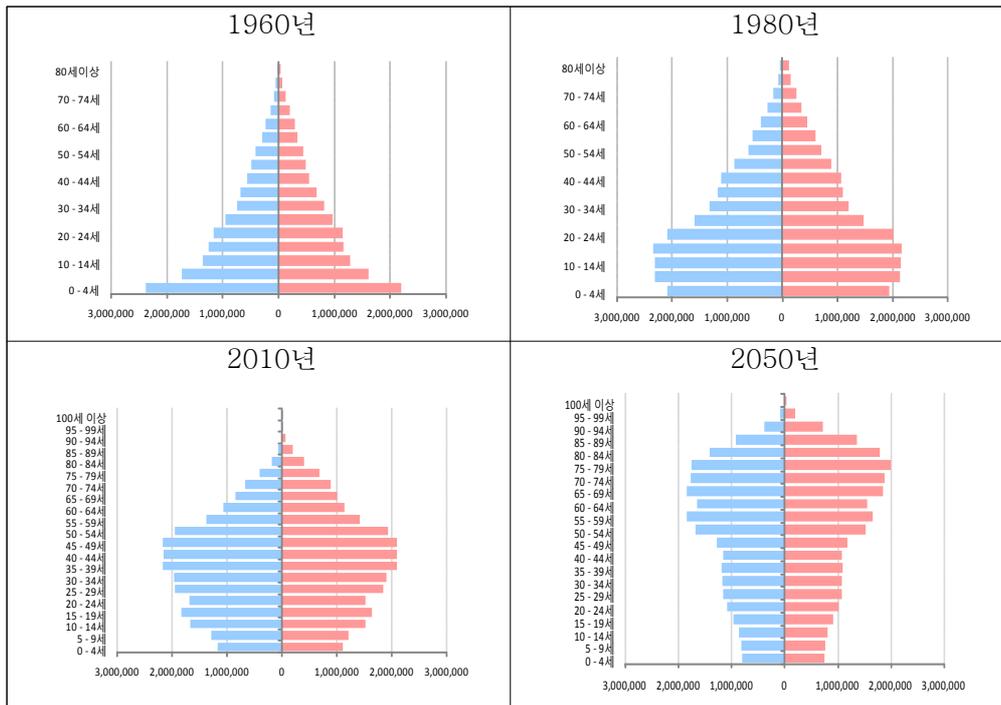
- 2012년 우리나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1.7%
 - 현재는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8.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 노인인구 7%에서 24%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26년으로 예상되며, 일본 36년, 프랑스 155년, 독일 78년, 이태리 81년, 미국 88년에 비해 매우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고령자의 고령화도 중요한 추세중 하나로, 전체노인 중 중기(75~84세), 후기노년층(85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즉 85세 이상 후기 노년층이 2010년에는 7.0%에서 2030년 10.5% 2050년에는 20.9%로 예측

- 인구구조가 고령화될 때, 노인의 건강보장과 연금 및 노인복지 등에 많은 사회보장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산업구조 조정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

[OECD 회원국의 노인인구 비율]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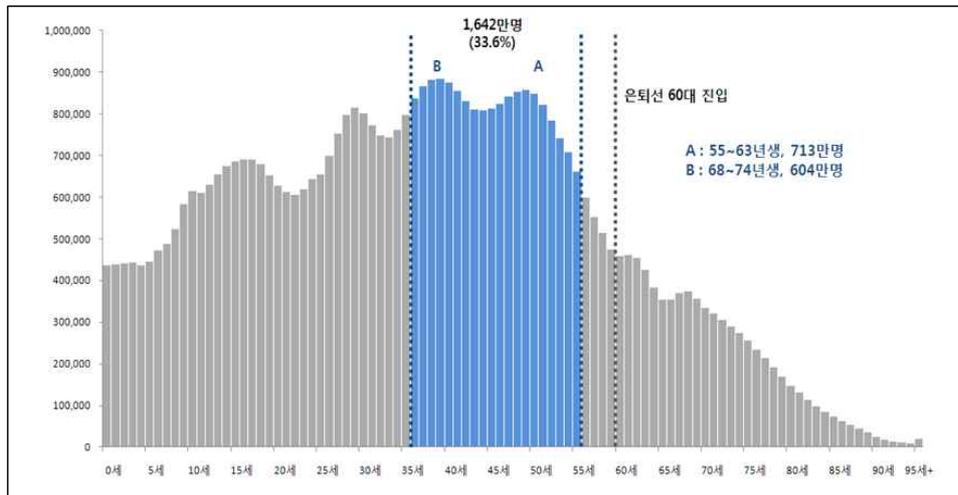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추계인구, 2005.

□ 베이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

-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713만명, 2차 베이비부머 1968~74년생 604만명
- 일반기업에서 55세에 정년퇴직한다면 2010년부터, 60세에 정년퇴직한다면 2015년부터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게 됨
- 노동시장을 빠져나갔을 경우 이들에 대한 일자리문제와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여가활동과 각종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질 것

[베이붐 세대의 은퇴구조]



□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관한 해외사례

- 사민주의적 접근(스웨덴을 중심으로): 공적보육서비스 체계화, 남녀평등에 기반한 일가족양립시스템 확립
 - 육아휴직제 활성화와 함께 육아휴직의 Papa Quota 제도, Speed premium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지원
- 보수주의적 접근(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심):
 - 프랑스의 경우 육아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지원과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
 - 독일은 나치시대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가족가치에 관한 전통적 태도를 유지하다가, 2005년과 2007년에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사민주의 접근으로 정책방향 선회
 - 이탈리아는 남부유럽국가들의 전형적 형태로 분류되며, 전통적 가족가치와 카톨릭 교회의 보수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미흡
- 자유주의적 접근(영국, 미국 중심)
 -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의존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석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필연적 귀결
-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과 사회정책적 접근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주의적 접근은 경제성장과 노동인력의 부족, 그리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둠
 - 사회정책적 접근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해결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돌봄 위기(care risk)에 문제의식을 두고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에서 부양과 재생산의 국가(사회) 책임의 강화에 초점을 둠

2)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 공유와 대응

-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부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인구억제의 성공사례로 평가됨
-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전까지도 정부의 공식적 정책방향은 출산억제 기조를 유지
- 1996년에 들어 공식적으로 출산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수정
 - 1995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1996년 정부가 위원회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방향 수정(이삼식 외, 2005)
-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컸고,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함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설치하고, 기본법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 수립 및 시행
- MB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제1차 기본계획의 내용의 보완판을 발표
- 2010년 제1차 기본계획의 완료와 함께, 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시행

□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의 평가

- 1차 기본계획은 범 정부 차원의 최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

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기본틀과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

- 반면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정책의 내용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지 못해,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정책 분야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조]



- 최근 정부는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5세아 보육 및 교육지원 범위를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청년인적자원 개발,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이 강화되고 있음
-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2012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하여,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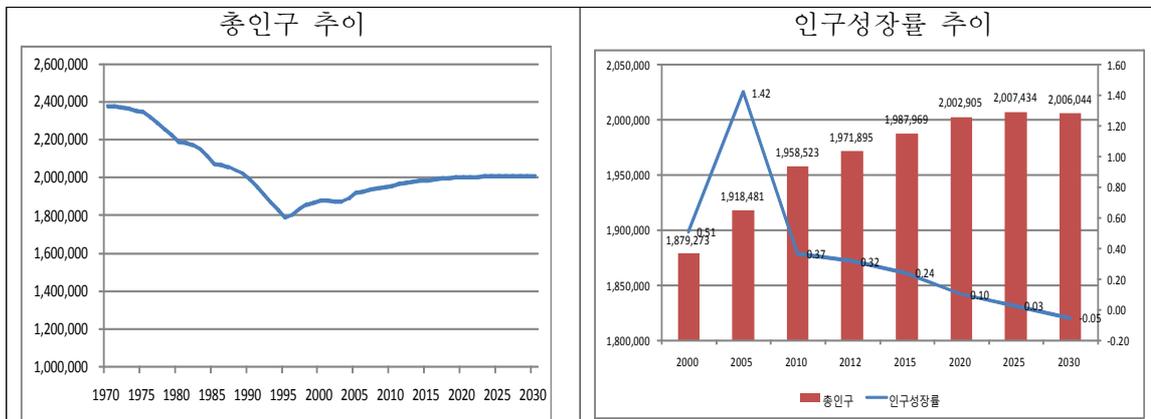
- 향후 보육서비스의 공공화 논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지자체 정책에서 일가정 양립정책분야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남의 정책방향에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충남의 여건변화

□ 충남의 인구학적 특성

-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1970년에 2,379천명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5년 1,784천명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2012년 현재는 1,971천명
- 향후 추세는 지속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5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9년에 2,000천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충남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추계인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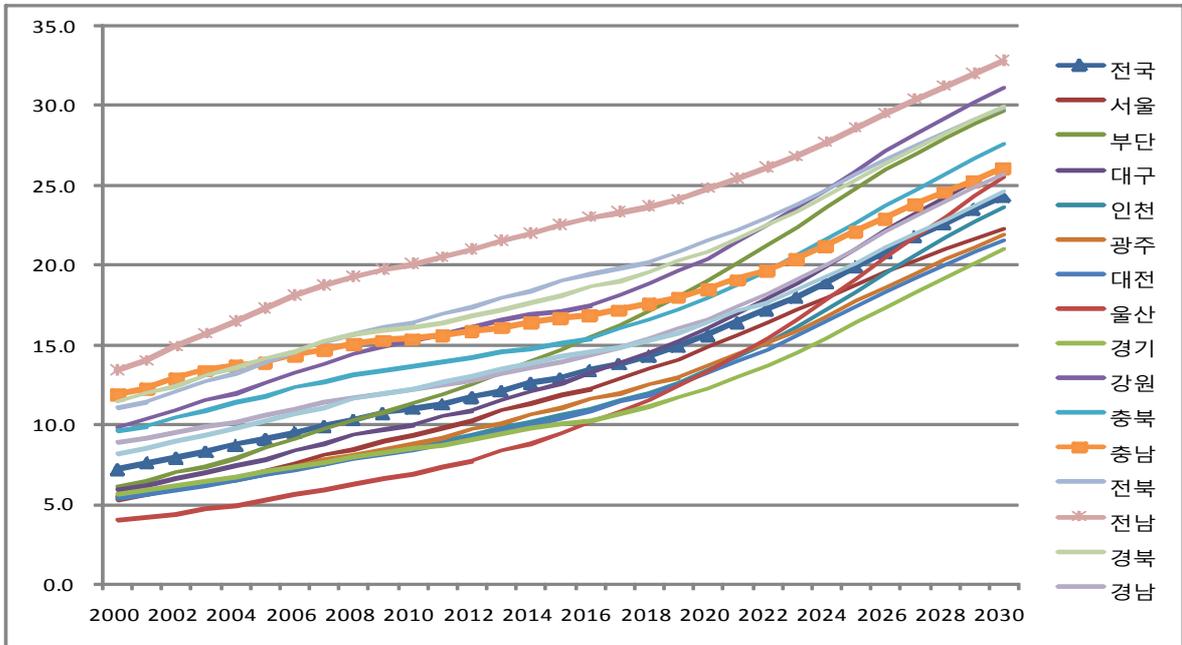
□ 충남의 노인인구비율

-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00년의 경우 전국 노인인구는 7.2%였으나, 충남은 11.9%를 나타내 4.7%p 더 높은 수준이었음
 - 2012년 현재 전국 노인인구는 11.7%인 반면 충남은 15.9%로 4.2%p로 지난 10여년간 격차가 크게 변하지 않음
 -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16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높았으나, 2012년 현재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30년에 전국 노인인구는 24.3%인 반면 충남은 26.1%로 격차는 1.8%p로 감소할 전망

□ 충남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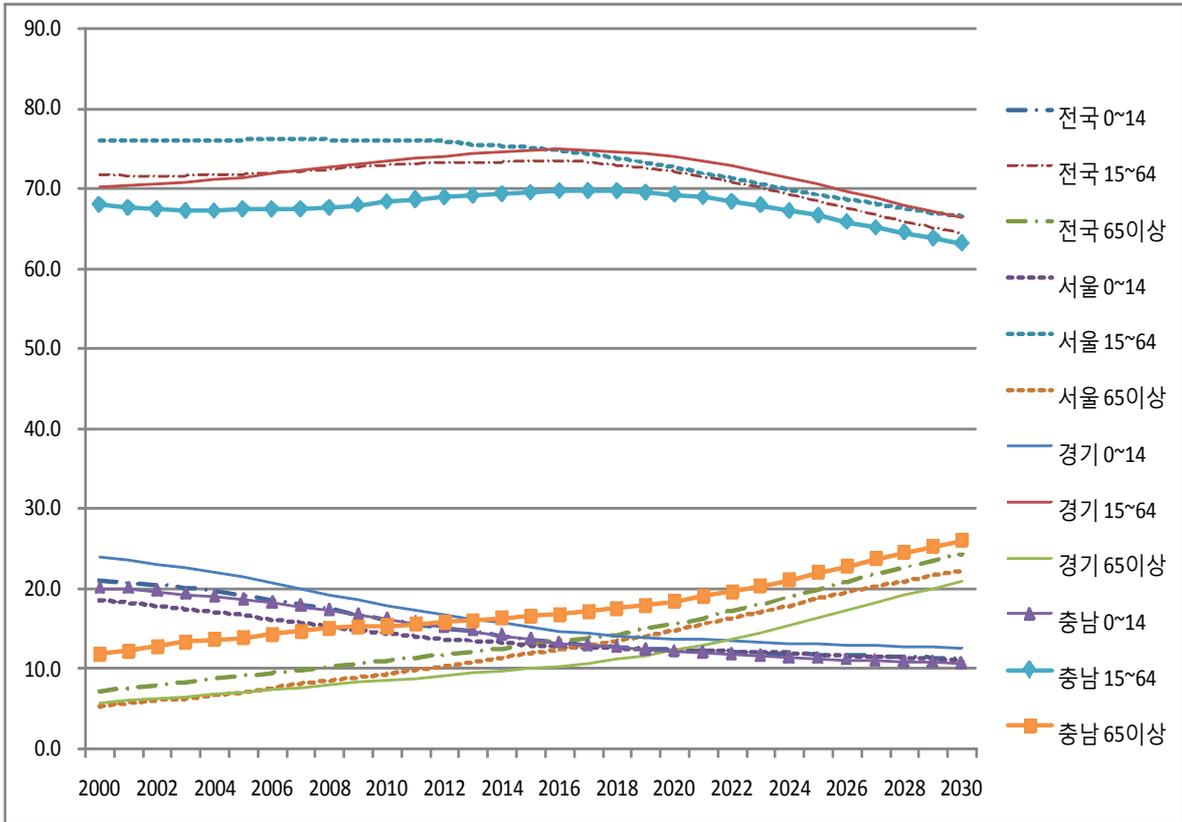
- 충남 인구구조는 다른 주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로 보기 어려움
-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전국수준에 비해 낮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낮으며, 이런 경향은 향후 2030년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수준에 비해서 높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도 높으며, 역시 이런 경향은 향후 2030년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 다만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국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이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전체적으로 충남의 인구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



자료: KOSIS, 추계인구, 2005.

[충남의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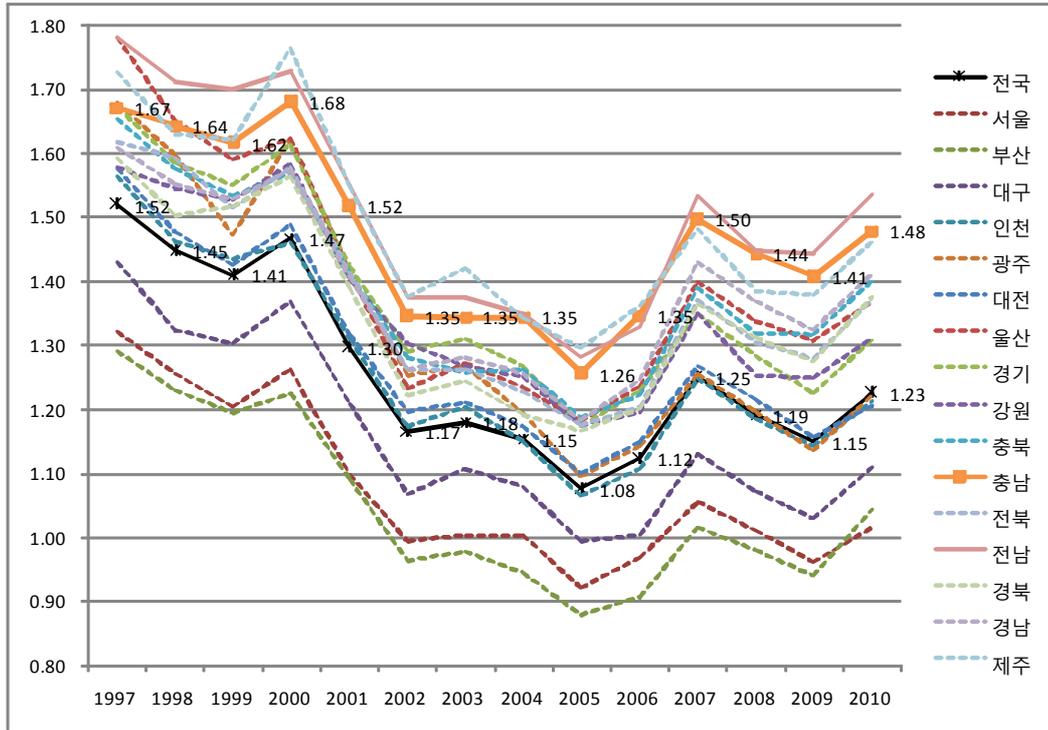


자료: KOSIS, 추계인구, 2005.

□ 충남의 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상위 두 번째를 기록. 전남 1.54에 이어 충남이 1.4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합계출산율은 1.15에 비하면 큰 차이라 평가할 수 있음. 최근 몇 년간 이 순위는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은 낮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2010년 평균 1.7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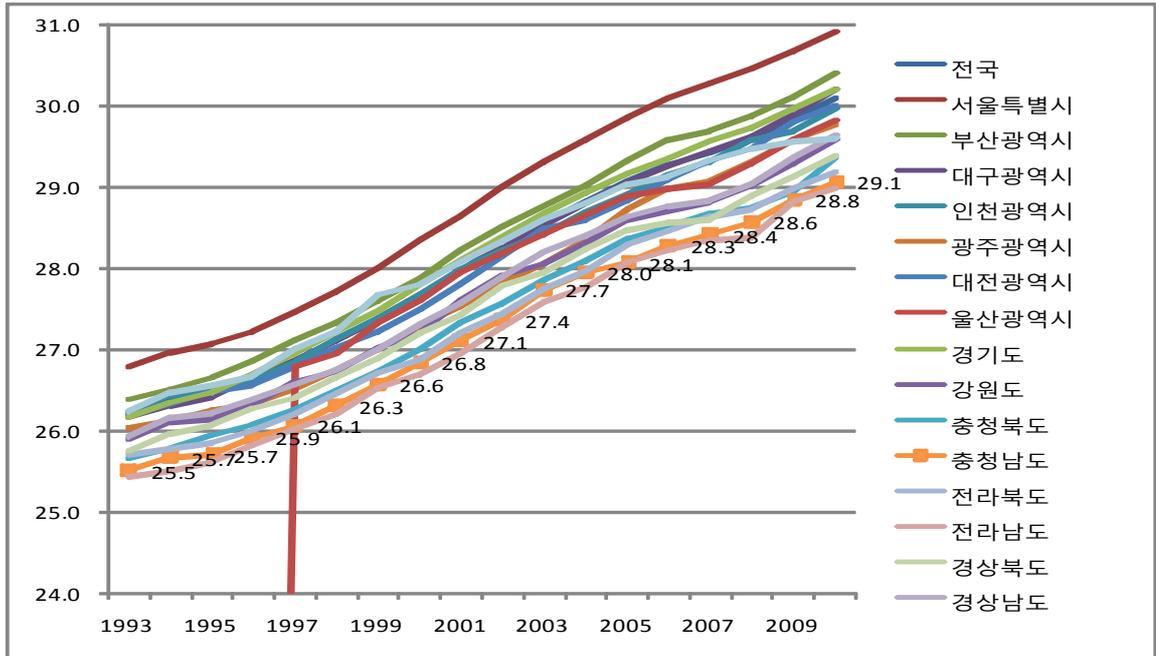
[충남의 합계출산율 추이, 1997~2010]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을 보면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첫째아를 일찍 출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경향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음
-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분명
- 다른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에서 현재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혼인연령도 낮고 첫째아 출산연령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첫째아 출산연령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29.1세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늦은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첫째아 출산 모의 평균연령]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 가임여성 인구의 구성

- 15-49세 가임여성의 연령집단별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의 20-24세 연령집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전국 수준이나 서울 또는 경기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 그러나 이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5-29세 연령집단은 2012년 현재 전국,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에는 더욱 그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또 다른 주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집단은 2012년 현재 전국, 서울, 경기도보다도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이런 추세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가임여성 규모가 감소하면서 향후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출생아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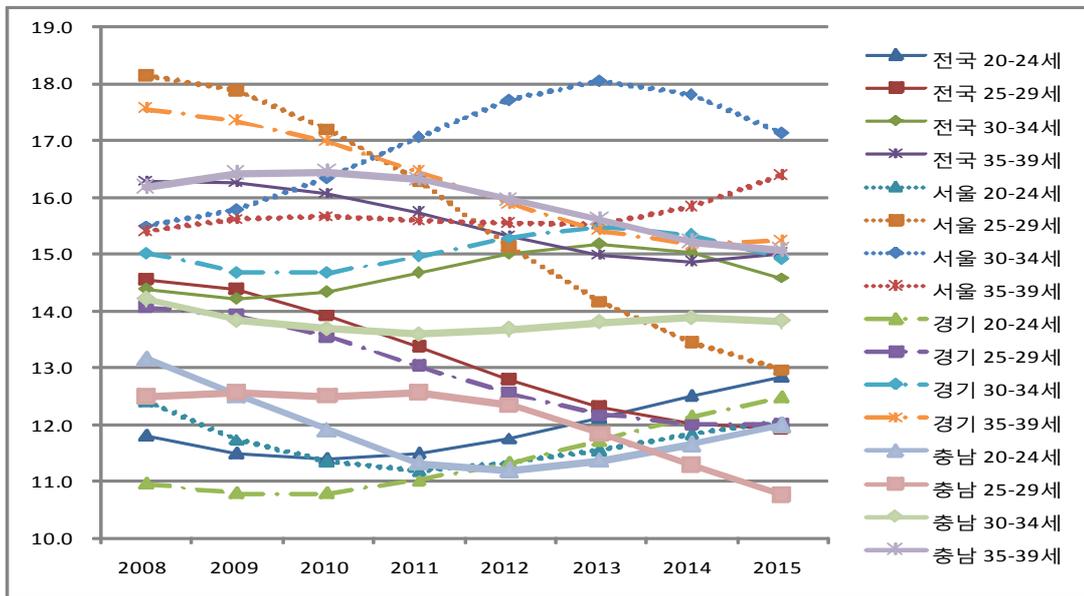
□ 전체 출생아수 중 연령 집단별 출산의 비중

- 충남에서 당해연도 총 출생 중에서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 비중이 2000년경부터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음. 이는 최근 10년 동안 충남의 높은 출산율이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비중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주출산 연령층 20-39세 중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또다른 연령집단은 20-24세 연령집단
- 따라서 충남이 전국수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20-29세 연령

집단이 전국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출산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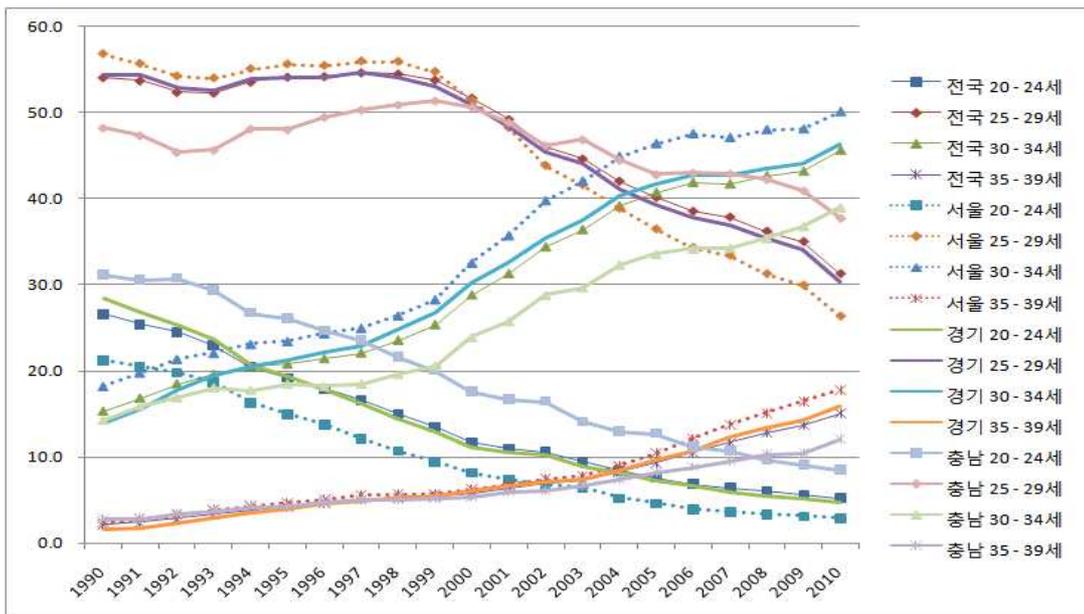
-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2010년에 처음으로 30-34세 연령층의 출산비중이 25-29세 연령층의 출산 비중을 앞질렀다는 점
- 이것은 충남에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낮은 출산의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향후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임여성 중 주 출산연령층의 구성비]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전체 출생 중 주 출산연령층 출산의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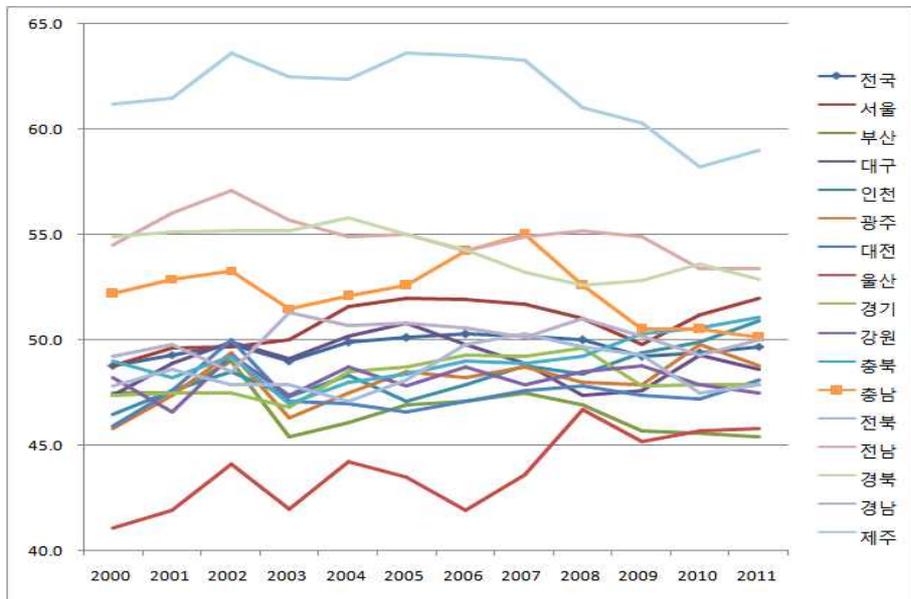
□ 가임여성 연령집단의 인구 이동

- 여성 연령별 순이동에서 주출산연령인 25-29, 30-34세 연령집단에서 전출보다 전입이 두 연령층 중 한 연령층이라도 1% 이상 많은 지역은 울산과 경기뿐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여성경제활동의 특성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수준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종사상지위별 구성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전국 여성 중 71.2%, 충남 여성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59.9%
- 이는 충남 취업여성 중 약 40%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로서, 전국 수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출산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 비율]

구 분	전국여성	충남여성
전 체	100.0	100.0
자영업주	16.9	19.4
무급가족종사자	11.9	20.4
임금근로자	71.2	59.9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성인지통계DB(이창익, 황창연, 2010: 24 재인용).

나.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평가

-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매우 미흡
 - 2010년 충남의 광역단위 자체사업은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공모전 실시 2개 사업뿐(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2010)
 - 2011년 실적에 따르면, CEO 포럼, 아이낳기 좋은세상 공모사업, 충남 다사랑 카드 운영 및 홍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조례 제정, 가족사진 공모,
 - 셋째아 이상 무상 보육 교육 추진을 위해 “만 5세아”를 셋째출생아“ 이상으로 전국 최초 전환 추진, 총 46억원 집행
 - 종사자 처우개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수당, 교재교구비 지원, 영유아 급간식시비 지원 등
 - 충남은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정책이외의 자체 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의 큰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위를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충남의 정책방향

1) 기본 방향

- 충남의 지역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충남브랜드 정책을 개발
 - “서울형 어린이 집”이나 경기도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같은 독창적 정책을 개발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출산의 정서적 메커니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시작될 수 있음. 지방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행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충남의 지역(인구)환경을 반영
 - 지자체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만 그것이 가능할 것

- 충남은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현재의 출산율은 높은 수준이나 인구대체수준에 미달하고 국제적 수준에도 미달
 - 첫째아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가임여성 규모가 감소함으로써, 향후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출생아수 규모 감소가 우려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아, 아동양육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향후 적극적인 출산친화적,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

- 복지 논쟁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곧 다가올 미래는 복지(특히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이에 대비한 재정계획, 정책적 대안, 주민의 욕구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청년층 지원 대책도 저출산 고령화 관점과 연계하여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함

□ 기존 정책의 평가를 반영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사업의 비중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충남만의 문제는 아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하여 향후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경제주의적 접근보다 사회정책적 대응에 집중

- 저출산 고령화를 인구 규모의 문제, 출산율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 국가재정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원인에 대한 고찰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 한계를 노출함
- 출산행위는 경제적 행위이기에 앞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사회(가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족을 둘러싼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을 두루 고려해야 함
- 특히 현대의 사회체계에서는 기술과 정보의 발달, 시장의 세계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 등에 의해서, 가족(사회) 구성원의 부양을 가족단위에만 위임할 수 없는 게 현실
 - 여기서 가족돌봄체계의 붕괴 위험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가족은 그동안 막대한 부양책임을 홀로 떠안았기 때문에, 과중한 피로감에 쌓여 있고, 이제 부양의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4. 핵심프로젝트

1)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공립 어린이집 확충)

(1)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대책에서 핵심은 보육과 일가정양립정책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
- 근대화과 산업화 초기에 가족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무는 전적으로 가족 내에 위임됨으로써, 누적된 현재의 가족(아동) 부양부담이 출산의 억제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64%가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 자녀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사업은 2012년 목표가 31개소로, 이 중에서 신축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장애아 전담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19개소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2012년 사업목표가 10개소에 불과

(2) 주요내용

- 충남 공공형 보육시설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2010)
- 학교 공간을 이용한 보육시설 설치, 농어촌 유희시설을 이용한 보육기능 보완 등의 방법으로 공립어린이집 확충(최은희, 2010)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 일시보육, 시간 연장보육, 상담 및 정보제공, 장난감 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 보육 복합센터 설치(최은희, 2010)
- 현금지원 정책보다 시설과 인력 및 프로그램과 같은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3) 기대효과

-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
- 자녀 양육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2) 아동 교통 수단의 공공화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각종 아동 관련 안전사고 및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미래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비를 위한 핵심과제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의 이동과정의 공간적 시간적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이 이동하는 경로를 책임지는 교통수단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 지자체 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등에 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및 관리 책임 부여
- 운전 기사의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당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

(3)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 자녀 양육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공공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3) 청년 가족구성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출산율 감소의 일차원 원인은 만혼화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
-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직업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기 결혼할 수 있는 전세자금의 필요성 제기
- 현재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기금 이용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더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
- 또한 국토해양부는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이 발생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중

(2) 주요내용

- 충남도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등의 이용기회를 과격적으로 부여
- 현실적인 전세자금의 지원 또는 대출 지원

(3) 기대효과

-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통한 혼인과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

4)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제도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가정양립정책이 강화되어 시행중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많지 않은 실정
- 이 중에 현재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 부담되는 측면이 많음.
- 실질적 인센티브가 미약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진하고, 대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참여하는 실정
- 그러나 현재 일가정양립 정책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기업부분으로, 기업의 참여정도에 따라서 가족친화환경이 큰 영향을 받음
-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후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립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직장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
-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자체 인증제도를 통하여 출산 친화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충청도에서 자체평가를 통하여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
- 가족친화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기존에 개발된 평가기준을 보완사용할 수 있음
- 평가 항목은 가족친화적 환경과 제도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가능성, 사용자비율,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 등 임신부와 출산여성의 편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
-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고려

(3) 기대효과

- 지자체 차원의 일가정양립정책의 모형이 되어 기타 지자체의 수범사례
- 가족친화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에 기여
-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의 발전에 기여

참고문헌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012.

충청남도, 민선5기 충남비전, 2010.

충청남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 2010.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김한근, 1993,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삼식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익, 황창연, 2010,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최은희, 2010, 충남 농어촌 보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4주제

충남 환경정책 기본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박사

[자료 별도 준비]

제5주제

충남의 지역산업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김선배 박사

내포시대 충남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충남의 지역산업정책 방향

김 선 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kkksb@kie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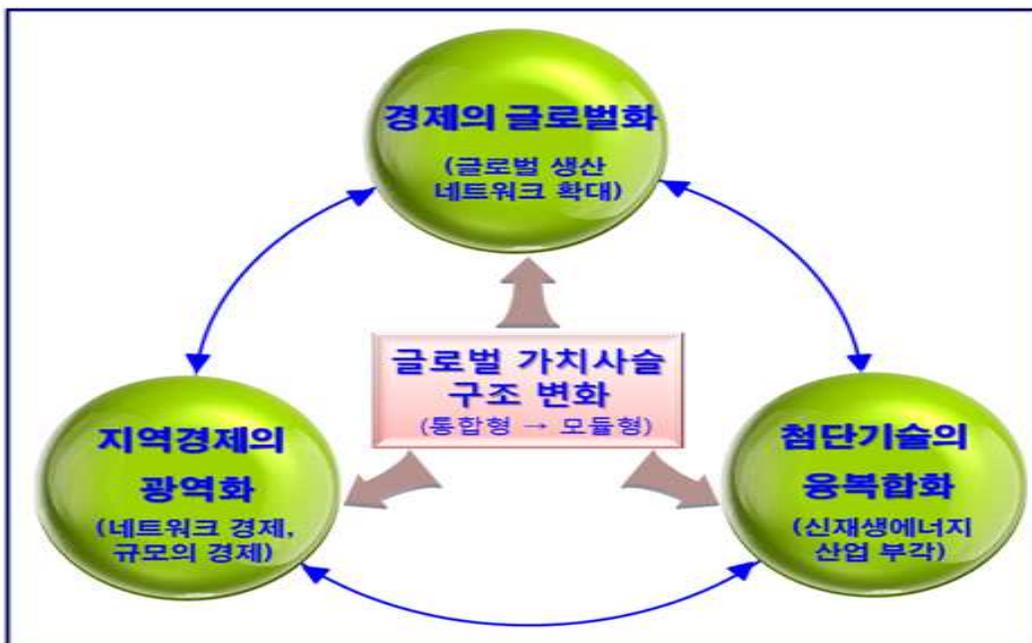
목 차

1. 산업경제 발전여건 변화
2. 우리나라 지역산업 정책의 동향 및 방향
3. 충남의 산업발전 현황 및 여건
4. 충남 산업정책의 방향 및 전략
5. 주요 프로젝트(추후 보완)

1. 산업경제 발전여건 변화

□ 글로벌 3대 메가트렌드 부상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신재생 에너지 부각), 지역경제의 광역화가 산업경제의 글로벌 3대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3대 메카트렌드는 글로벌 제품 가치사슬구조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글로벌 제품 가치사슬 구조는 기존 통합형 구조(Integral Architecture)에서 모듈형 구조(Modular Architecture)로 진전되고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생산공정의 통합과 분산, 기업간 네트워크의 개방성 정도로 파악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와 아시아 경제권 부상

- (국제적 : 東北亜 성장) 동북아시아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북미권 13조\$, 유럽권 12조\$, 동북아 11조\$)
- (국내적 : 세계 10위 경제대국) 2030년 우리나라 총 GDP는 5조 3,450억\$, 1인당 GDP는 10만 9,000\$
- 중국 부상에 따라 地經學的 이점을 지닌 충남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산업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

□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 (국제적 : 융합화) IT·바이오 등 신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
→ “결합·창조·변화”로 상징되는 「융합사회(Fusion Society)」 구현
- (국내적 : 첨단화) 기술시장 활성화, 원천기술 개발 강화, 유비쿼터스 등 국가적 첨단과학기술 투자 확대
- 충남은 INBEC(IT, NT, BT, ET, CT)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융복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2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제 산업기술의 허브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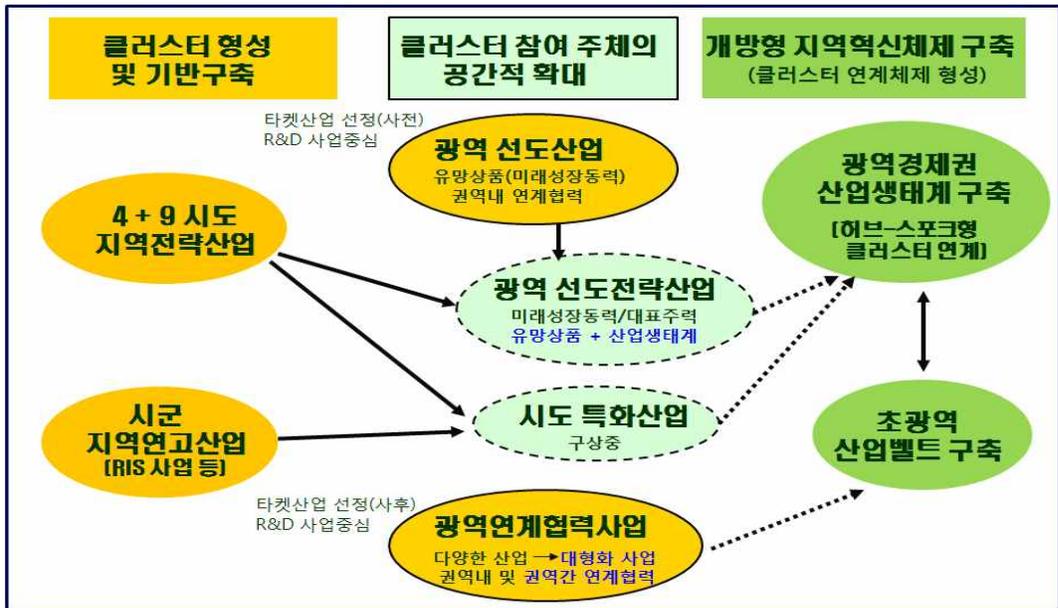
□ 지역경제의 광역화 촉진

- 전후방 연관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자원의 임계규모 확보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지역경제의 광역화가 필연적으로 수반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과 서해안 및 내륙첨단산업 벨트 추진은 충남의 지역산업발전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
 - 충남은 광역권(대전,충남,충북)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기반산업의 세계적 혁신거점 조성 가능성 서해안발전계획(초광역계획)의 추진으로 세계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가능

2. 우리나라 지역산업 정책의 동향 및 방향

□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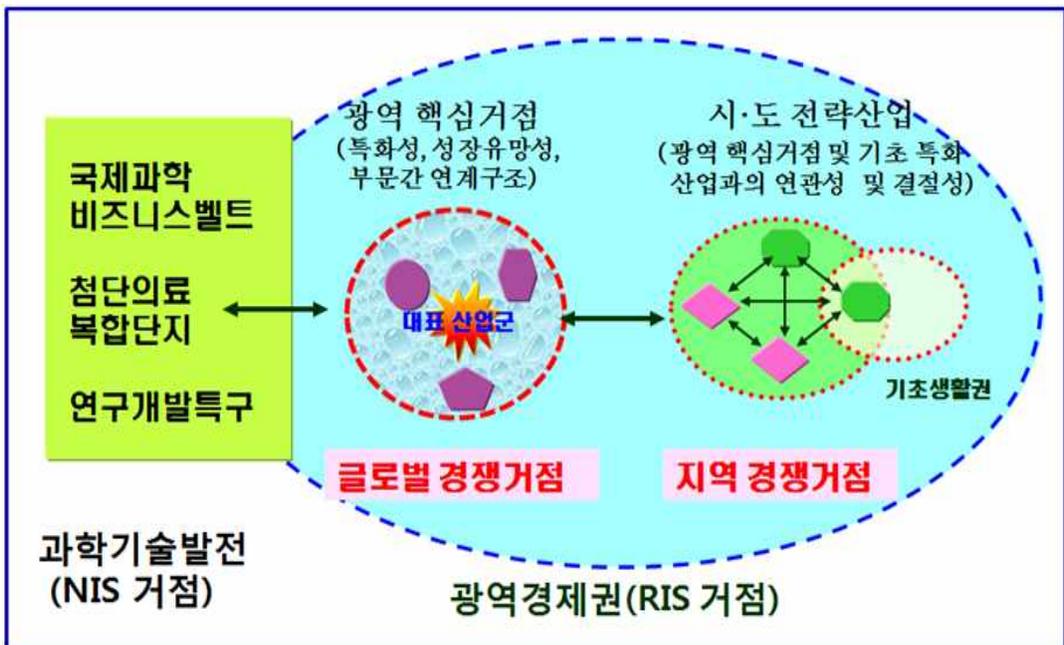
- 중앙정부(지식경제부)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 형성 및 기반 구축단계를 지나 클러스터 참여 주체의 공간적 확대를 강조하는 과도기 단계
 - 클러스터 형성 및 기반 구축단계 : 4+9 지역산업진흥사업, 시군 단위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
 - 클러스터 참여주체의 공간적 확대 : 광역선도산업(-> 광역선도전략산업) 육성, 광역 연계협력사업 등
-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 연계체제 형성에 기초한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광역경제권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초광역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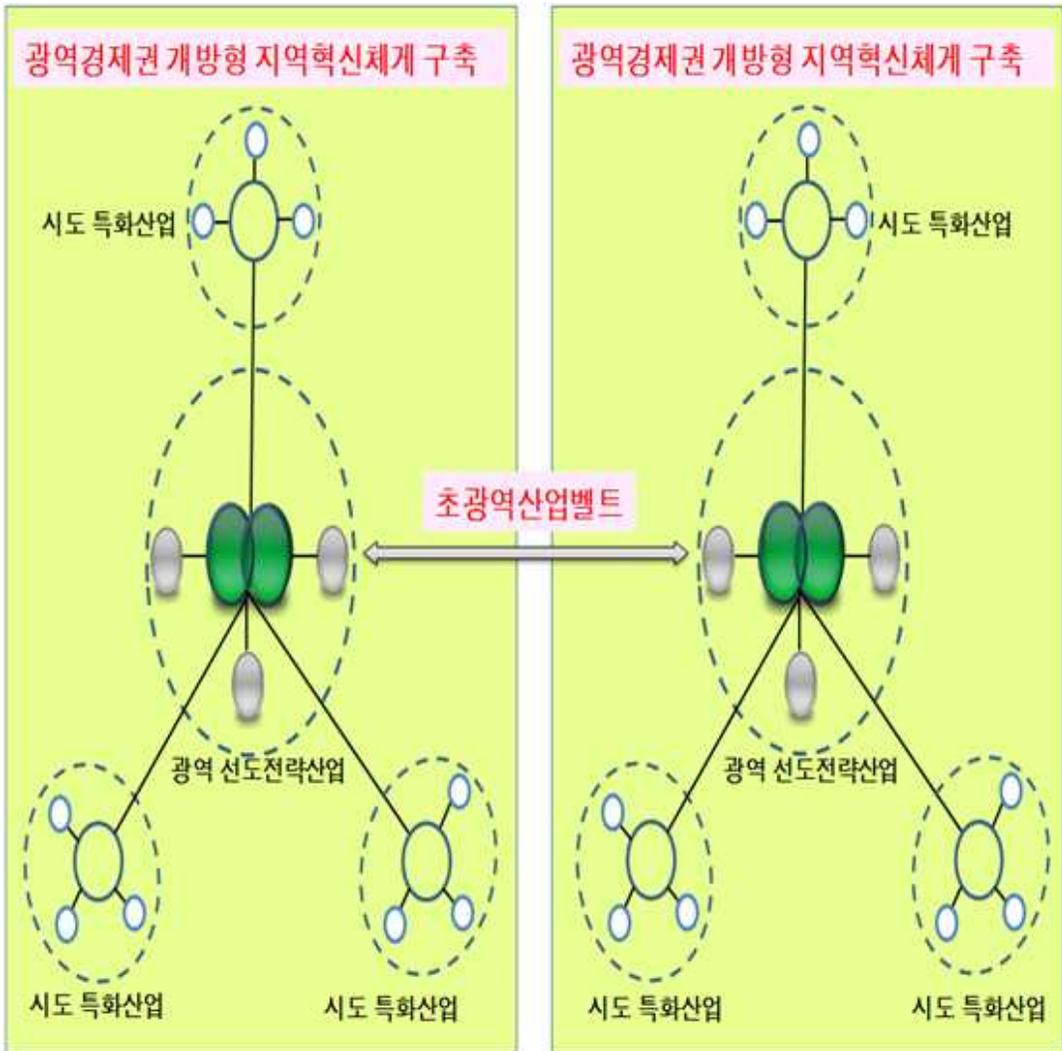


□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전망

- 과학기술발전(NIS 차원) - 산업육성(RIS 차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산업발전의 핵심 거점 형성(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 광역권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허브)는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 골격으로 육성 (선도산업과 시도 대표 전략산업과 연계)
- 광역경제권 내 산업발전의 파급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결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특화-연계 강화(지역 경쟁거점 클러스터)
 - 시도 특화산업 클러스터(스포크) 는 지역내 산업발전 파급효과의 극대화 (시도 전략산업과 시군 특화산업 연계)
- 광역경제권 내 산업발전 소권역 설정을 통한 역내 균형발전 및 역내외 연계 강화 추진 도모

<기본 구상>





<지역산업 육성체계 개편(안)>

3. 충남의 산업발전 현황 및 여건

□ 제조업의 산업비중 증가와 외연적 확대

- 도내 GRDP에 있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 28.4%, 2000년 30.8%, 2009년 47.7%로 타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
 - 동기간 전국은 1990년 24.1%, 2000년 23.3%, 2009년 25.6%
- 제조업의 비중이 급상승한 1998년 이후 최근 10년간 충남은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전국평균 성장률의 2배 이상 큰 성장을 보이며, 2009년 현재 제조업에 있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약 11%를 점유

<표> 충남의 제조업 현황(2000~2009)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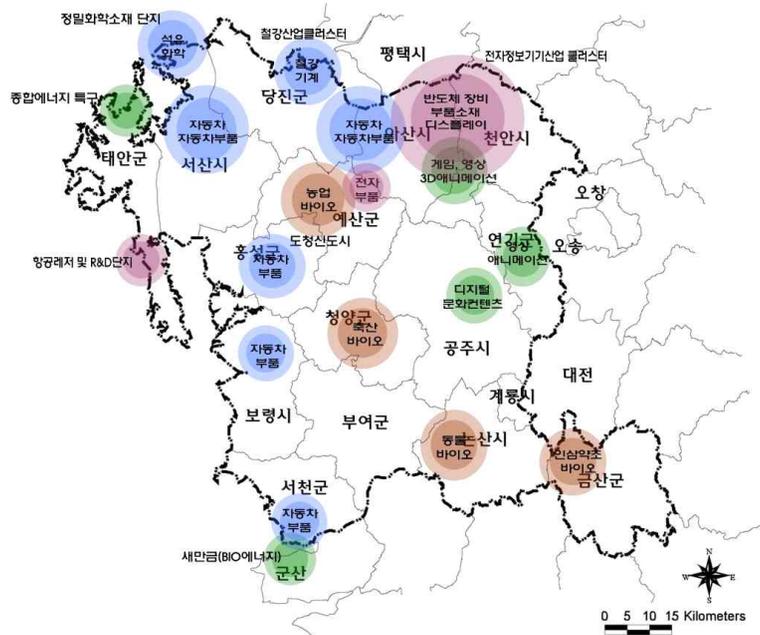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00-'04	'05-'09	'00-'09
제조업체수	전국(A)	51,148	57,198	57,996	1.7	0.3	1.4
	충남(B)	2,004	2,530	2,901	4.9	3.5	4.2
	B/A*100	3.9	4.4	5.0	-	-	-
종업원수	전국(C)	2,310,905	2,443,197	2,452,880	0.8	0.1	0.7
	충남(D)	122,900	157,358	182,757	4.8	3.8	4.5
	D/C*100	5.3	6.4	7.5	-	-	-
부가가치액	전국(E)	205,186,625	291,152,665	374,500,730	8.2	6.5	6.9
	충남(F)	13,517,144	24,810,337	42,716,633	14.3	14.5	13.6
	F/E*100	6.6	8.5	11.4	-	-	-

주: 제조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은 10인이상 제조업체(광업제외)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IT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집적 및 클러스터화 진행

- 최근 10년간 충남지역은 1차금속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 성장을 주도
- 섬유, 의복, 펄프 등의 경박단소형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
- 충남의 산업집적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따라 점차 서해안 및 내륙으로 확대
- 2010년 3월 기준으로 충남의 산업단지 5개소, 지방산업단지 41개소, 농공단지 86개소 등 총 134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난개발 방지 및 기업의 수요 대응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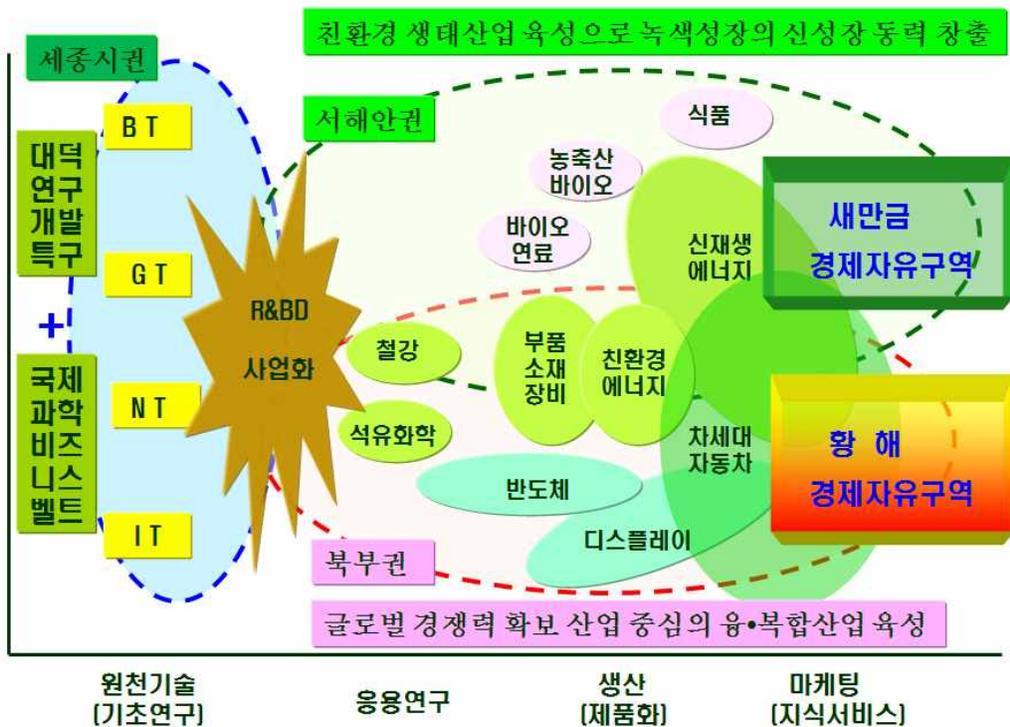
<그림> 충남 주요산업의 집적지 현황



4. 충남 산업정책의 방향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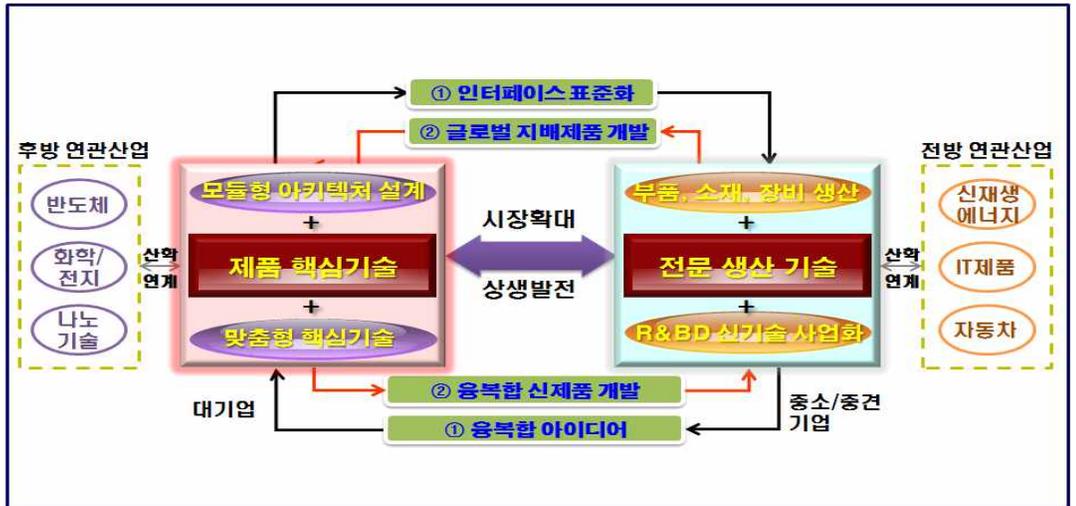
(1) 충남 지역산업 발전 구상

- 세종시권 : 첨단 과학기술 연구 및 R&BD 사업화 거점
- 북부권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력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 서해안권 : 친환경 생태산업 육성으로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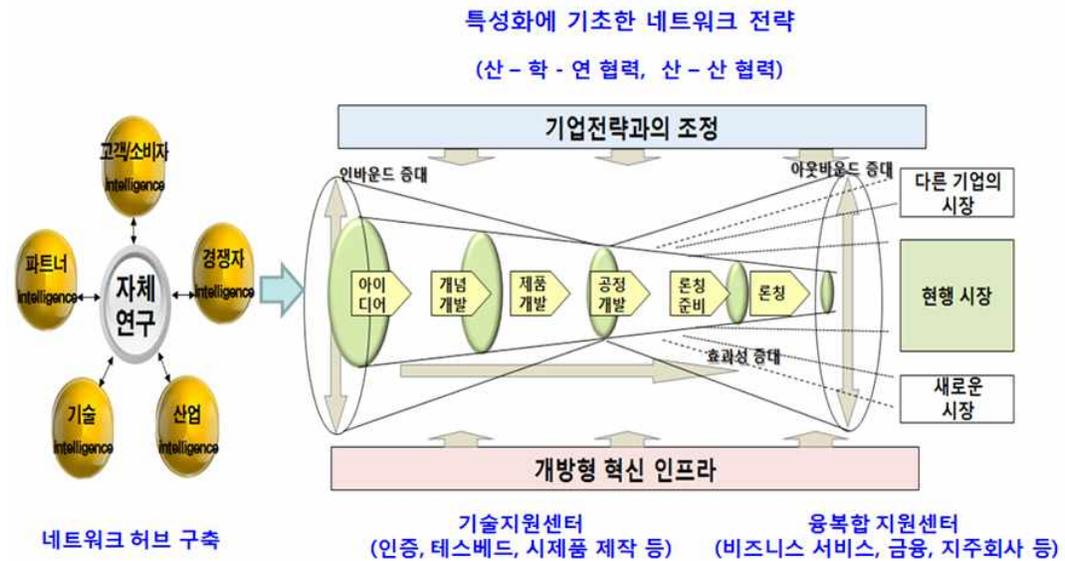


(2) 지역산업 육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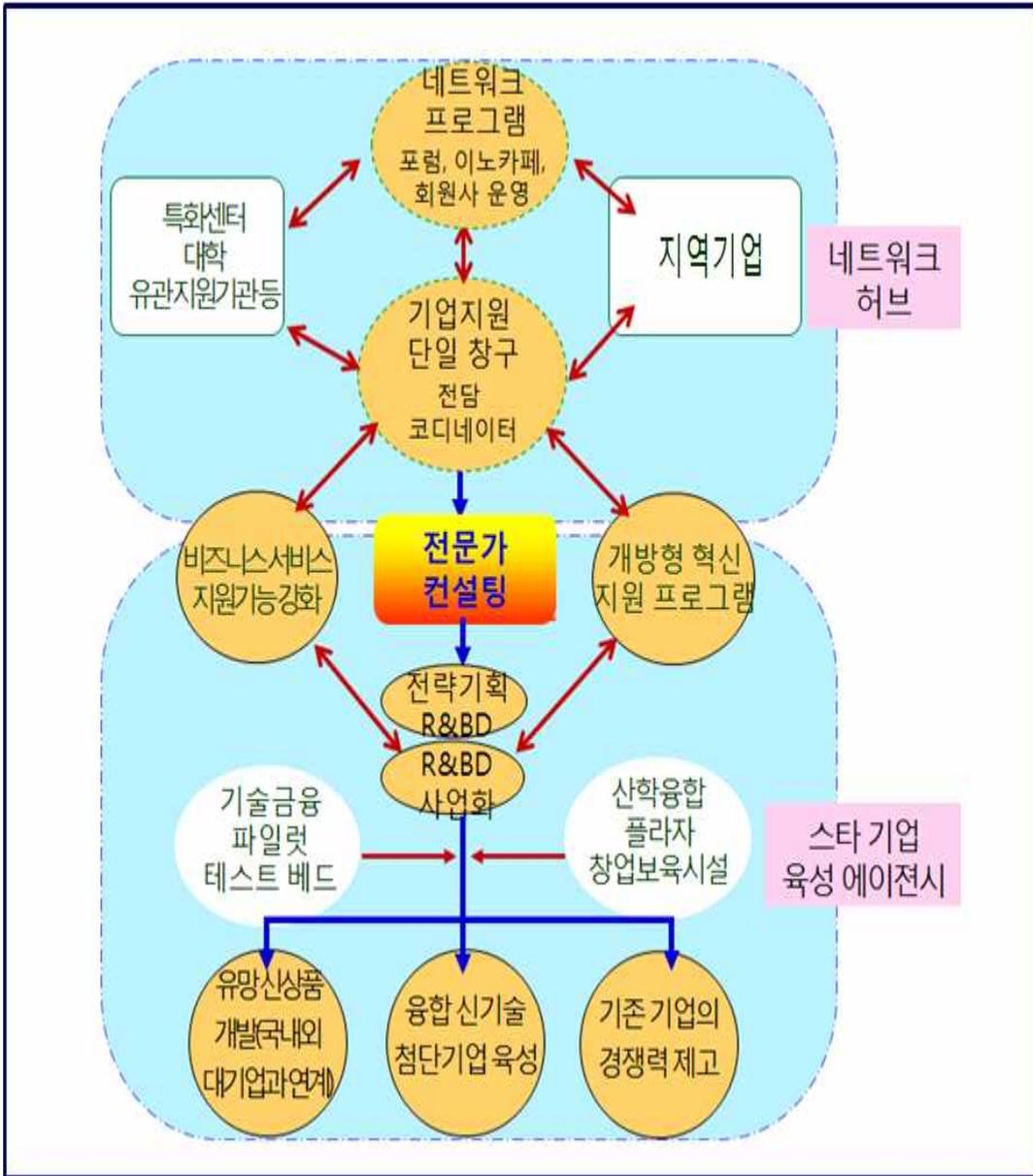
□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 개방형 혁신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형 지역산업 거버넌스 구축



5. 주요 프로젝트

(추후 보완)